



주간통일정세 2012-24(2012.06.04~06.1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2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영일, 동남아 순방 위해 평양 떠나(6/5,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5일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김영일 일행을 비행장에서 리용철 당 부부장, 키야키사 케우반디 북한 주재 라오스 대사, 레강바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 류홍차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 등이 배웅함.

- **평양서 北소년단대회…김정은 또 공개연설(종합)(6/6,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소년단 창립일인 6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소년단 연합단체대회에 참석해 축하연설을 했다고 북한매체들이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대회장인 김일성경기장은 조선소년단 창립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해 모여온 4만여 명의 학생소년들로 차고 넘쳤다"고 전함.
 - 김 1위원장이 주석단에 나오자 소년단원들이 그에게 꽃다발을 주고 붉은 넥타이를 매쳤으며 10분간 이어진 공개연설을 통해 소년단 창립절을 맞은 소년단원들을 축하하고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고 말함.
 - 소년단 대표들은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의 선창에 따라 "우리는 항일아동단의 전통을 이어 언제 어디서나 김정은 장군만 믿고 따르며 그를 결사옹위하는 소년결사대가 되겠다"고 맹세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최태복 당 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김승두 교육위원장 등 간부들과 모범 소년단원들이 대회장 주석단에 앉음.

- **김정은, 北소년단 창립 경축 음악회 관람(6/7,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소년단 창립 66돌을 경축하는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 '미래를 사랑하라'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



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최태복 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양진 당 통일전선부장,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조연준 당 조직부 1부부장,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 등이 함께 관람함.

- **김정은, 北소년단 대표들과 기념사진(6/7,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북한 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7일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 선전비서, 최태복 당 교육담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음.
- **北, 김정은 생모 이름 바꾼 기록영화 배포(종합)(6/8, 연합뉴스; 산케이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모를 '리은실'이라고 지칭한 기록영화가 북한에서 상영되고 있다고 일본에 있는 북한 인권 단체가 주장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함.
 - 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 (RENK)'라는 단체는 북한 내 협력자로부터 이같은 정보를 입수했는데 약 80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 고퉁희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동행한 모습이나 어린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3명이 함께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음.
- **北소년단 행사 폐막...김정은 찬양 일색(6/8, 연합뉴스)**
 - 북한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된 소년단 행사가 8일 폐막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 3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북한 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에는 북한 전역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에서 선발된 2만여 명의 소년단 대표가 참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음.
 - 북한 매체들의 이날 보도도 김 1위원장의 '어린이 사랑'과 '송고한 후대관'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음.
 - 노동신문은 이날 김 1위원장의 '배려'에 소년단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하면서 "김정은 동지에 대한 천만 군민의 막을 수 없는 매혹의 힘을 똑똑히 알려면 우리 소년단원들의 눈물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김정은 생모 고퉁희 베일 벗었다(6/10, 마이니치신문)**
 -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10일 베이징발 기사에서 고퉁희(2004년 6월 사



망)가 아들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남편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과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내부 영상 자료를 입수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

- 북한 세습 왕조인 김 패밀리의 일원으로 고영희의 활동 모습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약 1시간30분짜리 영상의 제목은 '위대한 선군(先軍) 조선의 어머니'으로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촬영된 고영희의 활동 모습이 수록됐음.
- 영상은 김 제1위원장이 어린 시절 그림 그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 김 국방위원장의 신변 보호를 위해 권총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김 국방위원장의 야전 점퍼를 손질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음.

■ **김정은동향**

- 6/6,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상유치원에 보내는 선물 전달모임, 6.4 진행(6.5,중방)
- 6/6,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6.6 '조선소년단' 창립 66돌('45.6.6) 경축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참석 및 '축하연설'(6.6,중통·중방·평방)
- 6/7,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행사 대표들과 기념촬영(6.7,중통·중방)
 -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문경덕, 리영수, 전용남(1비서)을 비롯한 청년동맹 중앙위 비서들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北, 6.4 박의춘(외무상)·공석웅(부상) 참가下 캄보디아 정부 부수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 일행 위해 연회 마련(6.4,중통)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축하연설을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안고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동감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자'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 및 찬양' 반향(6.8,중통·노동신문·중방/선군시대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크나큰 영광 길이 전하며)
-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6.9 새집들이를 한 희천2호발전소 종업원들(100가구)에게 컬러TV·살림도구 등 '선물' 전달(6.9,중통·중방)
- 최영림(총리), 개건중인 평양시 제1목욕탕을 돌아본 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 요해(6.10,중통·평방)



나. 경제

● 北 평양 골프관광 상품 판매...외화벌이(6/5, 연합뉴스)

-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여행사와 합작, 평양 골프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자사 홈페이지에 평양 골프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올렸는데 평양 아마추어골프시합 참가를 포함해 9월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일정의 평양 관광 상품의 가격이 1천800유로(한화 약 260만원)라고 밝힘.
- 이 골프시합은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와 북한의 여명무역회사가 지원하며 평양 국제골프클럽이 보증한다고 여행사 측은 전했는데 여명무역회사에 대해 "북한 내 가장 큰 대외무역회사"라고 소개함.

● 北, 협동농장 제한적 개혁 검토(6/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현재의 협동농장 체제를 소규모 농장 체제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RFA는 북한 고위간부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조선족 대북사업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의 토지개혁 모델을 검토하면서도 중국식으로 토지를 개인에게 분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규모 협동농장을 소단위로 쪼개 규모를 소형화하려고 한다"고 전함.
-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농지개혁' 등 중국식 개혁·개방 촉구 발언 이후 협동농장 개혁 시도를 일단 접었다고 조선족 사업가는 주장했는데 "남조선 대통령의 훈수(충고)대로 개혁한다는 논란을 낳을 수 있어 북한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함.

● 北 "황금평·위화도특구 무비자 출입"(6/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특수경제지대로 규정한 평안북도 신의주의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 외국인 무비자로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혀짐.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대로 출입하는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갖고 지정된 통로로 시중(비자)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힘.
- 통신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채택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소개하며 "이곳에서 투자가는 관세와 기업소득세, 토지 이용 등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가공, 중계,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경제지대 건설에 필요한 물자, 그밖에 정해진 물자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北 민화협 간부 "중국과 경제협력 강화할 것"(6/7, 연합뉴스)**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고위 간부가 7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천시가 전했다는 연합뉴스가 보도함.
 - 시에 따르면 리창덕 북한 민화협 부회장은 이날 인천시, 단둥시 등이 공동 주최한 '서해협력 포럼'이 열린 단둥 크라운 프라자 호텔을 방문해 송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단둥을 비롯해 선양(沈陽) 등이 중요한 곳이 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곳에서의)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송 시장은 "6일 선양에서 인천과 선양 사이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선양과 단둥 등지에서 남북이 함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안함.

■ 기타 (대내 경제)

- 평북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투자가는 관세와 기업소득 세·토지이용 등에 특별혜택을 받는다"고 소개하며 '지대 출입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비자)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강조(6.7, 중통/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다. 사회·문화

- **제3회 평양 아마골프대회 내년 5월25~27일(6/4, 연합뉴스)**
 - 제3회 평양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내년 5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된다고 영국의 루핀여행사 측이 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루핀여행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웹사이트 'northkoreanopen.com'에 따르면 내년 골프대회는 연습 하루,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며,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아마추어 골프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음.
 - 골프대회를 포함한 5월23일부터 28일까지 일정의 여행상품 가격은 999파운드(한화 약 180만원)라고 루핀여행사 측은 밝힘.
- **中 미술품 시장에서 北작품 관심 확대(6/4, 양성만보)**
 - 중국 미술품 시장에서 북한 작품에 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양성만보(羊城晚報)가 4일 보도함.
 - 신문은 성수기를 맞은 광저우(廣州) 예술품 경매시장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중국 내 북한 미술품 시장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은 크다고 전함.
 - 북한 미술품작품들은 2006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시장에 유입됐으며 작품 수준이 비교적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까지 가격이



- 배기량 뛰어오르는 등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음.
 - 북한 미술품은 소박하고 복고적이며 특유의 정서가 묻어난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문 소장가들도 생겨나고 있으나 유통되는 수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아직 고정적인 가격 체계와 안정적인 유통경로가 형성되지 않아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신문은 평가함.
- **평양 젊은이에 유행하는 옷은 후드티(6/6, 연합뉴스)**
 - 북한 평양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패션 등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중국의 격주간 시사잡지 세계박람(世界博覽)이 밝혔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함.
 - 세계박람은 사업 목적으로 북한에 상주하거나 자주 오가는 중국인들의 최신 경험담을 통해 요즘 유행하는 북한의 신세대 문화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 등을 소개함.
 - 평양에서 장사하는 화교 A 씨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옷은 모자 달린 셔츠인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면서 "시장가격이 200위안(약 3만7천원) 정도로 비싼데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함.
 - **中 단둥서 올 10월 북·중 첫 종합박람회(6/7, 단둥일보)**
 -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오는 10월 12~16일 '2012 북·중 경제무역문화여행박람회'가 열린다고 현지 매체인 단둥일보가 7일 보도함.
 - 이번 행사에서는 '우의·협작·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국 상품 전시와 경제무역 상담, 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관광지원 전시·협작 상담 등이 진행됨.
 - 박람회에는 중국 각지의 대북 수출업체 400여 개사가 참가해 의류, 전기전자, 식료품, 기계류 등 12개 품목의 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며 북한에서는 문화예술단 115명을 포함해 500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임.
 - 북측은 100여개 기업이 의류, 민속문화, 식료품, 건축자재, 전기전자, 기계설비 등 10개 품목의 제품을 선보일 계획임.
 - **北 "런던올림픽에 11개 종목 49명 출전"(6/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여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0차 하계올림픽에서 11개 종목에 49명의 선수를 출전시키게 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현재까지 조선은 여자축구와 마라톤, 탁구, 레슬링, 역도 등 11개 종목에서 49명(여자 35명, 남자 14명)이 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힘.
 - 이어 "역도, 레슬링 등의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며 "여자축구선수들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전함.



- **中 연변서 올 8월 北 미술품 경매(6/9, 연변인터넷방송)**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연지(延吉)에서 오는 8월 북한 미술품 경매 행사가 열린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전함.
 - 9일 연변인터넷방송에 따르면 연변공예미술협회 등은 올해 자치주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10일~9월12일 연변 민족공예미술품 교역시장에서 '제1회 연변문화예술품교역회'를 개최한다고 전함.
 - 중국과 주변 국가의 문화예술가와 작품 수집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교역회에서는 첫날 개막식에 이어 8월11일 북한 미술품 경매가 진행됨.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北, 여자축구·마라톤·탁구 등 11개 종목 49명(여자 35명, 남자 14명)이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 획득(6.8,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일본 이지스함 서해상 배치 검토 맹비난(6/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4일 일본이 서해 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매국이 열어준 항로를 따라 일본 함선이 서해 상에 들어오려 한다"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이명박 패당의 사대 매국 행위로 하여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침략의 미수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미국과 일본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결탁이 서해지역에서 벌어지게 된 데는 이명박 일당과 보수세력의 사대 매국행위를 떠나서 결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것은 손아래 동맹국을 돌격대로 내세워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도 철저히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함.
- **北, 다양한 채널로 日에 유골문제 협의 요청(6/6, 산케이신문)**
 -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인 유골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과 가까운 시부야구 지방의원 등은 지난달 15~19일 북한을 방문해 조선대외문화연락회의 황호남 국장(일본 담당)을 만남.
 - 당시 황 국장은 평양 시내 중심부 건설 현장에서 복수의 옛 일본군 헬멧과 함께 유골이 발견됐다면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가



조속히 의견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 **美 킹 특사 "현재 對北 식량지원 검토 안 해"(6/8, 연합뉴스)**
 - 일본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8일 말했음.
 - 킹 특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그것을 검토할 것인가? 아마도 (Possibly).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가? 아니다(No)"라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이 북한이 따라갈 훌륭한 사례라고 지적했으며, 킹 특사는 만일 북한이 미얀마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아마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우호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나는 북한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나는 미얀마가 북한의 훌륭한 선례라고 본다"고 말했음.

- **中, 금수 조치 어기고 대북 무기 수출(6/9,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 중국이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조치를 어기고 북한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포함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해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보도
 - 이 신문은 국가를 특정하지 않은채 동북아 지역 국가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회사들이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 유엔은 2009년 6월 12일 북한의 화물을 검사하고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품목의 거래도 금지하는 내용의 1874호 결의안을 채택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들은 금수조치된 물품들을 하부 위장 조직을 통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밀수하거나 중국 기업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고 다른 물품인 것 처럼 속여 북한으로 가져가고 있음.
 -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북한 기업에는 무기와 군사 장비를 주로 취급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도 포함돼 있음.

- **국제전기통신연합, GPS 교란 북한에 '경고'(6/10, 교도통신)**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의 GPS 신호교란에 대해 경고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
 - 이 통신에 의하면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히마둔 투레 사무총장은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국에서 지난 4월부터 5월에 걸쳐 일어난 GPS 신호교란과 관련 북한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 북한의 GPS 신호교란은 5월 중순 이후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경고를 받자, 국제기관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임.

- GPS 신호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ITU 헌장에 어긋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등에서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함.

● 中,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6/10, 도쿄신문)

- 중국 당국이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현지업자에 내렸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10일 보도
- 신문은 일본 수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지난달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과 어민을 북한이 나포했다가 풀어준 사건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중국이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 랴오닝(遼寧)성 북한 접경도시 단둥(丹東)의 관련업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도착한 중국 정부의 지시는 북한산 수산물을 6월1일부터 당분간 들여오지 말라는 내용임.
- 북한 동북부 항구 라선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다른 중국인 업자도 동일한 통지를 받았으며 "그런 통달(지시)은 처음"이라고 밝혔음.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 무역성 · 대외문화연락처 일꾼 등, 6.6 나이지리아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관 조의 방문(6.6, 중통 · 중방)
- 北 외무성 대변인, 6.9 '남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책임 전가 및 '이를 부추기고 눈감아주는 주변국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담화' 발표(6.9, 중통 · 중 · 평방)
- 일본과 미국의 '日美합동군사연습'(6.6-9, 규슈섬) 비난(6.9, 중통 · 평방)

나. 6자회담(북핵)

● 후진타오 "대화 · 타협이 유일한 북핵 해법"(6/6 신화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와 타협만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는데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함.
- 후 주석은 제12차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개막 전에 회원국 언론매체에 돌린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으며 "SCO 회원국들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후 주석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SCO 회원국들은 '6자(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와 이란이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풀기를 바라며 관련된 각 측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함.

3. 대남정세

- **북한軍 "성전·사죄 중 최후선택해야" 대남통첩(6/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에 대해 '보복 성전'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북사과를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통첩장을 통해 "지금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역적패당은 아이들을 위한 이 경사스러운 경축행사에도 심술사납게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총참모부는 "험악하게 번지는 사태와 관련해 역적패당에게 최후통첩을 보낸다. 우리 군대의 타격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겠는가"라며 "스스로 최후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함.
 - 총참모부는 "(남측은) 5월29일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채널A방송과 KBS, CBS, MBC, SBS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를 동원해 일제히 우리 어린이들의 경축행사를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펴고 있으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새로운 악행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수호이 전투기 개성까지 위협비행(종합)(6/6, 연합뉴스)**
 - 북한 공군의 수호이 전투기(Su-25)가 지난 5일 개성 상공까지 남하해 위협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6일 "어제 오후 5시 이후 북한의 Su-25로 추정되는 전투기 1대가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2~3차례 위협 비행한 뒤 돌아갔다"면서 "위협 비행시간은 불과 수분에 그쳤다"고 밝힘.
 - 북한 전투기가 올해 들어 TAL을 넘은 것이나 개성 상공까지 도달해 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소식통은 설명함.
 - 군의 한 소식통은 6일 "5월 중순 이후 북한 전투기들의 출격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많개는 하루 50여회 가량 출격하고 이 가운데 2~3차례는 전술조치선(TAL) 인근까지 남하 비행하고 있다"고 밝힘.
- **北대남매체 "탈북자는 변절자"(6/7,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하는 이유'란 개인필명의



글에서 "몇 푼의 돈 부스러기에 잔명을 걸고 어머니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자들의 나발통이 될 것을 자처해 나서는 자들을 변절자로밖에 달리 부를 수 있겠는가"라며 탈북자를 비난함.

- 매체는 "변절자란 지조나 신의를 저버린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며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품을 배고프고 춥고 힘들다고 등지고 자기의 부모 처자를 저버린다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르겠는가"라며 "이런 자들은 변절자라고 부르기 전에 인간쓰레기,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버려지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함.

● 수은,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 촉구(6/8, 연합뉴스)

-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은 8일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4일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달러의 상환기일이 6월7일이라고 조선무역은행에 통지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전함.

● 재미탈북자 "임수경, 의원직 즉각 사퇴해야"(6/8, 연합뉴스)

- 재미 탈북자모임인 미주탈북자인권·선교회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은 8일(현지시간)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최근 '막말 파문'과 관련, 의원직 사퇴를 촉구
- 탈북자 마영애(55·여)씨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의 독기서린 말은 그의 북한에 대한 태도, 탈북지들에 대한 평소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석고대죄하고 주제넘는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 지난 1989년 임 의원이 전대협 대표로 방북했을 당시 감시원 자격으로 금강산 관광 등에 동행했다는 마씨는 "나도 당시는 진정으로 그를 '통일의 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북한 독재국가에서 짐승처럼 살다 간신히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증오한다면 '통일의 꽃'이 아니라 '통일의 독버섯'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

● 北 "南도발 부추기는 주변국은 책임져야"(6/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남조선을 저들의 이기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이명박) 역적패당의 위협하고 무모한 도발책동을 계속 부추기고 눈감아주는 주변국이 있다면 그 후과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소년단원들의 대축전에 대해 유독 이명박 역적패당만 악담질을 계속 해대고 있으며 그 도수는 한계선을 넘어섰다"며 "미친x마냥 최후발악을 하는 역적패당이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엄청난 재앙을 몰아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엄중성과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대변인은 "역적패당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도발을 걸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데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며 "우리를 한사코 자극해 현재 계획 하지도 않고 있는 핵시험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 대응조치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리가 호전적인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와 주변국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반공화국 제재압박 분위기를 조성해보자는 것"이라고 비난

● 6·15선언 12돌 맞아 남북 작가 풍경展(6/10, 연합뉴스)

- 6·15 남북공동선언 12돌을 앞두고 남한과 북한 풍경화 대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고양문화재단은 남한의 박정렬(66)·서용선(61)·손장섭(71)·황재형(60)과 북한의 정창모(1931-2010)·선우영(1946-2009) 등 남북 한국화와 조선화의 대가 6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풍경남북—풍경으로 넘어보는 우리 땅' 전시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 연다고 전함.
- 한반도 남북의 풍경을 남북한 작가들의 풍경회를 통해 한 자리에서 함께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며, 주최 측은 작고한 북한 정창모와 선우영의 작품은 남한에서 처음 전시된다고 설명했다.

● 남쪽 종북논쟁에 논란 北…연일 민감 반응(6/10,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현충일인 지난 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국회를 둘러싼 정치상황과 맞물려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음.
-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국가관과 대북관을 둘러싸고 이른바 '종북' 논쟁이 그 어느때보다 뜨겁기 때문임.
-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발언 당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색깔론은 출로가 아니다'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역도가 직접 나서서 '종북세력이 문제'라고 떠들고 있다"며 "남조선 보수패당의 발광적인 색깔론 소동은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추악한 정치테러행위"라고 공격했음.



■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00호'(6.9),李大통령 친인척 및 측근 인물들(박희태 前 국회의장·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 등)의 '부정부패사건 연루' 거론 및 '反정부투쟁 전개' 선동(6.9,중통·중·평방)
- 남측의 지난(4.28-5.13) GPS 전파교란사태 '北 소행설' 제기는 "대결광대극 연출, 또 다시 우리(北)를 걸고드는 모략남조극의 구실" 이라고 비난(6.9,평방/동족대결을 위한 모략극 전파교란설)
- 군사기밀(GPS전파교란장치 등)유출 간첩사건 관련 '서투르게 꾸며낸 모략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색깔론, 중복논란'에 대한 反보수 투쟁 선동(6.10,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후진타오 "대화·타협이 유일한 북핵 해법"(6/6)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과 타협만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선택이리는데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제12차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개막 전에 회원국 언론매체에 돌린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음. 그는 이어 "SCO 회원국들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그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고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됨. 후 주석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SCO 회원국들은 '6자(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와 이란이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풀기를 바라며 관련된 각 측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프가니스탄이 독립을 유지하는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테러와 마약이 근절된 이웃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SCO 회원국들의 뜻"이라고 언급했음.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개막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음. 파키스탄, 이란, 몽골이 옵서버로, 스리랑카와 벨라루시는 대화 파트너로 참여 중임.

● <中 6자회담 재개 물밑조율..북·미 선택은>(6/7)

- 중국이 최근 장기 공전중인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참가국들을 상대로 물밑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적극 호응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현지 외교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중국이 최근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물론 미국 등을 상대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6자회담 재개 일정을 회담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음. 이와 관련,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北京)에서 이날 열린 제12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앞



서 6개 SCO 회원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며,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지난 4월 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 발사로 무산된 '2.29 합의' 이행을 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국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북한 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논평기사에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 발사를 계획했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상기시킨 뒤 "미국은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하며 조선(북한)도 지속적인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입장은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여전히 단호함.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등 '진정성있는 행동을 먼저 하라'는 메시지를 재확인하고 있음. 미국은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또는 중단과 같은 북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동시에 대남도발 중지,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진입허용 등을 '진정성있는 행동'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외교소식통은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협상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서 "북한이 대화재개를 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전에는 중국이 노력한다고 해도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내 여론이 반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북한이 도발 행위의 중단과 IAEA 사찰단 초청을 서두르고 우라늄농축활동 유예 등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이행해야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할 경우 미국이 소극적이거나 호응하면 북핵 국면의 전환 가능성이 타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러-美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모스크바서 회동(6/7)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글로프 아태담당 차관이 6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마르글로프 차관과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면담에서 북핵 6자회담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현안들이 논의됐다"며 "양측이 북핵 협상 재개에 공통의 관심을 표시하고 양자와 다자 틀을 통해 이 방향으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했던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의 하나인 러시아와 회담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모스크바 방



문에 이어 9일까지 벨기에와 프랑스를 순방할 예정임.

● 미국방 "북핵, 中에도 똑같은 위협"(6/8)

- 북한의 핵확산 시도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이른바 '혈맹'으로 여겨지는 중국에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지적했음. 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패네타 장관은 지난 6일 인도 뉴델리의 국방분석연구소(IDSA)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북한의 핵확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중국에도 다른 지역과 똑같은 수준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면서 "지역의 안보, 번영,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음.
- 이어 패네타 장관은 미국의 안보 도전과제에 언급, "우리는 미래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개의 지역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태평양과 중동을 지목했음. 그는 특히 태평양 지역에 대해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비롯한 여러 도전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과 북한과의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번에 1개 이상의 적과 대결하기 위해 충분한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이 있을 때 양쪽 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음. 패네타 장관은 이밖에 미국의 아태지역 해군전력 강화 방침과 관련, "우리는 태평양지역에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은 한국에 있다"면서 "앞으로는 태평양지역 전역에서 이른바 '순환 주둔(rotational presence)'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美 킹 특사 "현재 對北 식량지원 검토 안 해"(6/8)

- 일본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8일 말했음. 킹 특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그것을 검토할 것인가? 아마도(Possibly).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가? 아니다(No)"라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이 북한이 따라갈 훌륭한 사례라고 지적했음. 킹 특사는 만일 북한이 미얀마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아마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우호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북한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나는 미얀마가 북한의 훌륭한 선례라고 본다"고 말했음.
- 킹 특사는 또 평양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미얀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가뭄에 관한



뉴스를 봤지만, 지난주 큰 비가 내려 기뭇이 해갈됐다는 소식도 들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전체적인 식량 상황에 대한 평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킹 특사는 일본 방문에 이어 9일에는 한국을 방문해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 중·북 관계

● 中 단둥서 올 10월 북·중 첫 종합박람회(6/7)

-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오는 10월 12~16일 '2012 북·중 경제무역문화여행박람회'가 열린다고 현지 매체인 단둥일보가 7일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이 광범위한 분야의 종합박람회를 공동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번 행사에서는 '우의·협작·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국 상품 전시와 경제무역 상담, 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관광자원 전시·협작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임. 박람회에는 중국 각지의 대북 수출업체 400여 개사가 참가해 의류, 전기전자, 식료품, 기계류 등 12개 품목의 제품을 전시할 계획임.
- 북한에서는 문화예술단 115명을 포함해 500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임. 북측은 100여개 기업이 의류, 민속문화, 식료품, 건축자재, 전기전자, 기계설비 등 10개 품목의 제품을 선보일 계획임. 행사 조직위원회는 현재 참가업체 모집과 전시 준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로 했음.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은 대북 교역의 70%가 이뤄지는 중국 내 최대 대북 무역 거점임.

● 대만 여행업계, 中경유 北관광상품 곧 출시(6/7)

- 대만 여행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을 경유한 북한 관광 상품을 출시한다고 중국시보가 7일 보도했다. 이 관광 상품은 대만을 출발, 중국 선양(瀋陽)에서 고려항공으로 갈아타고 북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전체 7박8일 일정 가운데 북한에서 3박4일 또는 4박5일을 보내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체류함. 주요 관광지로는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과 개성, 평양 시내, 묘향산 등이 검토되고 있음. 여행업계는 비자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29일부터 관광이 가능하다고 밝혔음. 업계는 북한 측도 이번 관광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5만 대만달러(약 200만원) 선에서 여행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음.
- 업계 관계자는 여행이 시작되면 매주 금요일 한 차례씩 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음. 대만 여행사들은 지난 3월 사전 점검을 위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주요 국경도시를 둘러보는 순회 시범관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북한은 관광객의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지역이지만 무한한 관광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고 말했다.



● **中외교부, 北中 "어업분쟁 해결됐다"(6/8)**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8일 "중국과 북한 간에 (최근) 어업 분쟁은 해결됐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근래 발생한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국은 밀접한 소통을 했고 관련 어민이 이미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북중 간 나포사건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앞서 중국의 주간지인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은 지난 2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과 단둥(丹東)의 어민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바탕으로 서해의 북한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북한 당국에 뒷돈을 주고 불법어로를 해왔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초순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들이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하고서 거액을 요구했다가 북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했었다. 한편 류 대변인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은 불법 입경(入境) 북한인에 대해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中, 금수 조치 어기고 대북 무기 수출"(6/9)**

- 중국이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조치를 어기고 북한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포함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해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동북아 지역 국가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회사들이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은 2009년 6월 12일 북한의 화물을 검사하고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품목의 거래도 금지하는 내용의 1874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들은 금수조치된 물품들을 허부 위장 조직을 통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밀수하거나 중국 기업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고 다른 물품인 것 처럼 속여 북한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북한 기업에는 무기와 군사 장비를 주로 취급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도 포함돼 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의 차량은 이 회사의 허부 위장 조직인 장광무역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사대 차량 4대를 수입한 것임. 또한 조선통봉회사는 지난해 5월 중국 기업으로부터 미사일 제조에 사용되는 바나듐 2t을 구입했다. 이들 물품은 모두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으로 선적됐다. 보고서는 "유엔은 그동안 다롄항을 통한 대북 무기 수출과 관련해 중국에 해명을 요구해왔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책임을 다른 국가 소속의 선적회사로 돌리거나 답변 자체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러한 금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하나에 4만~6만 파운드(한화 약 7천 500만~1억1천만 원)의 뇌물을 중국 세관 직원에게 제공함.
- 보고서는 "불법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북한은 내용물을 다른 물품인 것 처럼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조하고 중국회사의 이름으로 물품을 구



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은행이나 무역회사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만나 무기 거래 대금을 전달하는데 이는 중국 당국과 세관의 묵인 하에 이뤄진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돼 북동지역 국경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파산상태인 북한에 연료와 식량을 공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외교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中,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6/10)

- 중국 당국이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현지업자에 내렸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수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지난달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과 어민을 북한이 나포했다가 풀어준 사건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이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랴오닝(遼寧)성 북한 접경도시 단둥(丹東)의 관련업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도착한 중국 정부의 지시는 북한산 수산물을 6월 1일부터 당분간 들여오지 말라는 내용임. 북한 동북부 항구 라선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다른 중국인 업자도 동일한 통지를 받았으며 "그런 통달(지시)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산 수산물의 대중 수출은 일부나마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북한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정부는 수산물 금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옴. 북한 수산물은 큰 가리비와 바다참게 등이 주종으로 북한군 산하 기업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음. 앞서 북한의 핵실험 실시 등에 대한 제재로 일본이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자 최근 그 대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했음.

라. 일·북 관계

● "北, 다양한 채널로 日에 유골문제 협의 요청"(6/6)

-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인 유골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과 가까운 시부야구 지방의원 등은 지난달 15~19일 북한을 방문해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의 황호남 국장(일본 담당)을 만났음.
- 당시 황 국장은 평양 시내 중심부 건설 현장에서 복수의 옛 일본군 헬멧과 함께 유골이 발견됐다면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조속히 의견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2차 세계대전 때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군이 한반도로 이송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헬멧과 함께 발견된 유골이 일본군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도 지난 4월 중순 고(故) 김일



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일본 방문단에게 유골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복수의 채널로 협의를 요청한 것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식량 지원을 중단하면서 식량 확보가 불안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유골 반환을 위한 현장 조사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 작년 對美 군수품 판매 세계 7위"(6/4)

-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에 한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군수 물자 및 용역이 1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해외구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까지 1년간 연방조달통계시스템에 기록된 조달물자 구매액은 총 3천740억 달러로, 이 가운데 239억6천600만 달러(6.4%)가 외국에서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음. 국방부의 해외구매 항목에는 미사일, 선박, 화약 등 전투용 물자는 물론 각종 생활용품과 연료, 건설비용, 서비스 등이 포함됐음.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쟁을 수행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들인 군수품이 전체의 25.6%에 해당하는 총 61억2천800만 달러 어치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20억9천500만 달러)와 독일(18억3천500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음. 또 캐나다(16억5천만 달러), 쿠웨이트(13억 달러), 영국(11억8천600만 달러)에 이어 한국이 11억1천600만 달러로 7번째를 기록했음. 한국으로부터의 구매액은 지난 2010회계연도의 9억9천100달러보다 12.6%나 증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전체 해외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4.7%로 높아졌음. 이밖에 일본(10억3천400만 달러)과 이라크(9억5천만 달러), 싱가포르(7억2천900만 달러) 등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미 국방부는 지난 2010회계연도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총 3천829.25달러(3건) 어치를 매입했다고 밝혔으나 2011회계연도에는 북한으로부터의 구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석유가 65억8천700만 달러(27.5%)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비용(15%)과 최저 생활필수품(12.7%), 건설비용(12%), 전투용 차량(5.1%) 등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음. 프랭크 켄달 국방부 조달·기술·물류 담당 차관대행은 보고서에서 "세출예산법에 따라 해외로부터 구매한 군수 물자 및 용역의 항목을 상·하위 군사위 등에 각각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의회에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1회계연도에 대외군사판매제도(FMS) 방식으로 200만 달러 이상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입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총 60개국이며, 이들 국가의 총 매입액은 142억2천7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난항(6/4)

- 한국과 미국이 사거리 300km로 제한된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관한 실무적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달 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서는 한반도 전역을 커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쪽(미국측)에서는 연장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실무적 차원에서 타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양국 최고 정책결정권자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실무협상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의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일부 언론에서 양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550km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하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에 관한 결정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달 중순에 열린 2+2 회담에서도 의제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 한미, 14일 워싱턴서 외교·국방장관회담(6/6)

- 한국과 미국은 14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6일 밝혔다.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인 2+2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방안, 한반도 지역문제, 범세계적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거론되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비롯한 각종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측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상그릴라대회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환영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상그릴라대회에서 3국 국방장관들이 합의한 수준보다 강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는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반도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 채택 이후 아·태지역 전략에 대한 미측의 설명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현재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를 비롯한 회의 종료 후 공동선언 채택 방안, 회의 정례화 문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2+2회의는 2010년 7월21일 서울에서 개최됐음.

● 주한미군·카투사 순직자 추모비 건립(6/8)

- 정전협정 이후 한국에서 순직한 주한미군과 카투사(KATUSA) 장병 추모비가 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내에 건립됐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밝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한미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건립한 추모비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북한의 도발과 각종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주한미군 92명과 카투사 3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 제임스 서먼 연합사령관은 제막식 추모사를 통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목숨을 잃은 연합사 전사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를 역사상 처음으로 건립했다"면서 "이 추모비는 희생된 카투사와 미군 장병에 대해 우리의 존경의 표시"라고 밝혔다. 서먼 사령관은 "현재 3천300여명의 카투사는 미군과 어깨를 맞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카투사와 미군의 끈끈한 관계는 우리의 상호운용 능력을 발전시키며 즉응적인 전투준비태세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만리장성 늘이기' 중국 노림수>(6/6)

- 중국이 만리장성의 '공식 길이'를 동서로 크게 늘린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만리장성이 가진 상징성을 활용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내부적 안정을 다지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 중국은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까지 불리는 비약적 발전을 해왔음. 그러나 중국은 주변부의 소수 민족 문제가 향후 나라의 통합, 나아가 흥망까지 좌우할 결정적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이번에 만리장성이 뻗어나간 방향은 이런 중국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 줌.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 학계에서조차 만리장성의 서쪽 끝은 간쑤성의 가옥관(嘉峪关), 동쪽 끝은 산해관(山海關)이라는 것이 정설이었음. 그러던 것이 5일 국가문물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쪽으로는 신장위구르족자치구까지, 동쪽으로는 지린성, 헤이룽장성까지 연장됐음.
- 신장자치구는 이슬람 교도인 위구르인들이 독립을 즐기치게 주장하는



곳으로 민족 간 폭력 사태와 각종 테러, 충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곳임. 중국 당·정은 서쪽 변경인 신장자치구와 서남쪽 티베트자치구의 안정적 관리가 오늘날 다민족 국가로서의 중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관건이 되는 요소로 보고 있음. 당장의 민감성은 신장자치구나 티베트자치구 정도에 미치지 않지만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또한 중국 중앙정부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됨. 고구려와 발해의 발원지이기도 한 이곳은 역대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경험이 중첩된 곳이라는 점에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서로 '역사상의 주인'임을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큰 지역임. 특히 한반도 통일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본다면 한국인과 혈연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조선족이 많이 산다는 점은 중국 중앙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됨. 따라서 이곳에 장차 한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북3성이 철저히 중국의 역사에 귀속되는 곳이라는 점을 역사적, 이론적으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이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동북공정'을 통해 구체화됐음. 정식 이름이 '동북 변경 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 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인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변경사지연구중심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3성에 대해 시행한 종합 연구 프로젝트임.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연구를 다수 수행했고 이는 점차 중국 역사의 '정설'로 수용되는 추세임. 이런 맥락에서 중국 국영 CCTV(중국중앙)TV는 작년 11~12월 6부작 다큐멘터리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 명칭)'을 방영하면서 발해가 중국 동북지역에 살던 소수 민족인 말갈족이 세운 나라로 소개하고 백두산이 만주족 등 중국 소수민족의 영산이라고 주장했음.

● 中, '만리장성 연장' 한국 내 비판에 반발(6/8)

- 만리장성을 옛 고구려와 발해 영역까지 늘린 중국의 조치에 한국 학계와 언론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중국 언론과 학계가 '생트집'이라며 반발했음.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중국의 만리장성 길이 발표를 한국이 우롱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 측의 반발 기류를 상세히 소개했음. 환구시보는 한국의 주류 언론 매체와 학계가 "만리장성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는 수사를 동원하면서 중국의 발표 내용을 평가절하했다고 비판했음.
- 환구시보는 대표적인 '반한(反韓) 학자'로 분류되는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뤼차오(呂超)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 반응을 '생트집'이라고 규정했음. 뤼차오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만리장성이 산해관(山海關)에서 가옥관(嘉峪關)까지라는 과거의 설은 부정확한 것"이라며 "실제로 중국 안에는 이보다 더 오래된 만리장성이 매우 많다"고 주장했음. 그는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중국 안의 장성은 각 민족이 각각 다른 시기 세운 것"이라며 "고구려 시기의 유적을 포함해 모두 중국 민족의 문화와 유산"이



라고 강변했음. 뒤차오는 "이번 측량 결과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판은 의미가 없다"며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의 만리장성 측량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날조"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그는 더 나아가 "한국인들은 고구려가 그들의 조상이므로 만리장성에 고구려의 것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황당한 것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생트집"이라며 "고구려 문제는 학술 토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이 자신의 유산에 대한 측량·조사를 하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그렇지만 대체로 중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은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만리장성 길이 연장이 한·중 간에 새로운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루지 않고 있음. 상업지 성격이 강한 환구시보는 정식 관영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감한 대외 문제에 관련해 중국 관변의 주류 견해를 대변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음. 언론 통제가 강력한 중국에서 민감한 국제 문제와 관련해 환구시보 보도는 일종의 '보도 지침' 같은 역할을 함. 뒤차오는 환구시보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비판하거나 북한을 옹호할 때 단골로 인용하는 인사임. 중국 국가문물국은 지난 5일 역대 만리장성의 총 길이가 옛 고구려와 발해의 영역인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포함, 총 2만1천196.18km라고 발표했다.

다. 한·일 관계

● 日 정부 "韓 위안부 기림비 빈 조약 위반"(6/9)

- 일본 정부가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위안부 평화비)가 외국 공관의 존엄 침해 금지를 정한 빈 조약에 저촉된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했음. 9일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8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작년 12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된 것과 관련 "외국 공관에 대한 위엄 침해 방지를 규정한 빈 조약 22조 2항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답변서를 확정했음.
- 일본 정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기림비를 건립한 이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와 철거 요구를 계속해왔음. 일본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지도 서비스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표기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기술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구글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한국령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기한 문제와 관련 회사 측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결정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각료회의에서도 구글이 지도서비스 '구글맵'에 독도의 소재지가 '울릉군'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음. 위안부 기림비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서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물은 데 대한 공식 답변임.



라. 미·중 관계

● <美 '아시아 해군증강'..中봉쇄-동맹 강화 노림수>(6/4)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힘 대결이 노골화되고 있음.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오는 2020년까지 미 해군함정의 60%를 이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른바 'G2 각축'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음.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은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차례 공개 천명했었음. 지난해 11월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태 지역을 미국의 안보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고 올 1월에는 미국의 전략적 중심축을 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내놔음. 다시 말해 패네타 장관의 발언은 '오바마 선언'을 구체화한 것임. 태평양과 대서양에 50%씩 배치된 해군전력이 2020년까지 각각 60%와 40%로 조정되는 것은 선언을 넘어 구체적 군사조치로 이어짐을 의미함.
-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음. 아·태 지역에서 경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새로운 맹주로 부상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 물론 패네타 장관이 상그릴라 대화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개입 및 관계 강화와 중국의 발전 및 성장은 완벽하게 양립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로 여겨지는 현실임. 오히려 패네타 장관이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대목이나 "단순히 함정의 숫자뿐 아니라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 함정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지가 느껴짐.
- 일각에서는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미국 정부가 일종의 고육책으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미국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때 이해할 수 있긴 함. 하지만 내부 요인을 떠나 미국의 중국 봉쇄 움직임은 어쩔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음. 패네타 장관이 3일 중국과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인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격상을 희망한 것이나 곧 인도를 찾는 것도 중국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됨. 중국의 결의 또한 간단치 않아 보임.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할 태세임. 특히 해양 진출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비롯해 태평양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것으로 예상됨.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인 런 하이취안 중장은 패네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이것을 무관심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는 위협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하고, 여하한 종류의 복잡하고 중대한 상황들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음. 미국의 움직임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임.
- 지난해 상그릴라 대화에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을 비롯해 군 장성과 국방·외교 전문가를 파견한 중국은 올해는 일부 정부 관료만 보냈음.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마틴 텀프시 합동참모본부 의장, 새뮤얼 록클리어 신임 태평양함대 사령관도 대거 참석한 미국과 대조적임. 미국의



의도를 간파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느껴지는 대목임. 페네타 장관의 발언 속에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 관계의 강화를 중국 견제와 함께 구사하고 있는 점임. 특히 그는 이날 연설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한 톤으로 주장했다. 페네타 장관은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함께 아태 지역 안보 전략의 핵심(linchpin)이자 우선순위"라며 "미국 지상군의 감축에서 불구, 향후 5년간 상당한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진핑, 美 '옛 친구들'에 "인적교류" 강조(6/4)

-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미국의 '옛 친구들'과 다시 만나 미중 간의 인적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휴일인 3일 베이징에서 테리 브랜스타드 미 아이오와 주지사를 단장으로 한 15명의 친구 방문단을 맞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지난달 29일 중국을 방문한 이들은 27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 시 부주석과 친구 사이로 통합. 시 부주석이 초보 당간부 시절인 1985년 허베이(河北)성 정딩(正定)현 당서기 자격으로 축산대표단을 이끌고 아이오와주 머스카틴이라는 시골마을을 방문했고 그때 맺은 '관계'가 줄곧 이어져 오고 있음. 시 부주석은 사실상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서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머스카틴을 찾아 그곳의 친구들과 함께 이틀간 미국 시골 정취를 즐기기도 했음. 브랜스타드 주지사를 비롯해 15명인 이들 친구 대표단은 이미 허베이(河北), 상하이(上海)를 방문하고서 베이징을 찾았고 5일 귀국할 예정임.
- 시 부주석은 옛 친구들과 만나 "인적 교류가 중미 관계를 촉진하는 중요한 바탕이자 새로운 중미관계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부주석은 이어 "중미 양국은 상호 존중, 조화로운 공존, '윈-윈(Win-Win)' 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 발전을 이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음. 시 부주석은 아울러 "중미 양국 간에 하루 9천 명의 여행객이 오가고 미국에는 16만 명의 중국 학생이 유학하고 있다"며 양국은 더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역설했음. 시 부주석은 옛 친구들에게 "중미 관계 발전에 더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음. 이에 브랜스타드 주지사는 "시 부주석과 아이오와의 오랜 친분은 미중 국민 간 우호의 상징이고 양국 간 미래의 관계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음.

● 中 외교부, 美 아태군사력 증강에 거부감 표시(6/4)

-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한데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음.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의 그런 시도는 "시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아태지역은 현재 평화를 추구



하고 협력을 도모하면서 발전을 촉진해가는 추세"라며 "각 측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촉진하는데 온 힘을 들여야 한다"고 역설했음. 그는 "(그런 상황에서) 군사안보 문제가 돌출하고 군사력 추가 배치, 그리고 동맹 체제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시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이어 "아태지역은 중국과 미국의 이익이 집중적으로 교차하는 곳"이라면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중국을 비롯해 해당 지역 국가들의 이익과 우려를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 그는 아울러 "미국은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동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것이야 말로 중미 양국은 물론 아태지역 국가 이익과 기대에 들어맞는다"고 강조했다.

- 앞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아태지역에서 6척의 항공모함을 유지하는 한편 2020년까지 미군 함정의 60%를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는 쪽으로 군사력을 재조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류대변인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으로 주변국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은 경제와 사회발전 수준에 맞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중국 자체의 안보이익에 맞춘 것으로 여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음. 그는 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해당 해역은 쟁론할 여지가 없는 중국의 주권이 통하는 곳"이라면서 이해당사국들이 양자 간 담판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美국방 방문 베트남·인에 '견제' 외교>(6/7)

- 중국 수뇌부가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방문한 베트남과 인도의 고위층과 잇따라 접촉해 관심을 사고 있음.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는 전날 베이징(北京) 소재 인민대회당에서 S. M. 크리슈나 인도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약속했음. 리 부총리는 중국과 인도의 건전한 관계가 두 나라 국민의 이해에 들어맞는다고 강조하면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엄청난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아시아가 급부상하는 시점에서 중국과 인도 간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음. 그는 그러고서 중국은 인도와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키면서 (양국 간) 분쟁들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국경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적 의전으로 볼 때 오는 가을 제18차 당 대회에서 차기 총리 지명이 유력시되는 리 상무부총리가 크리슈나 장관을 접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임.
- 또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은 6일 베트남을 방문해 '당(黨) 대 당(黨)' 외교에 나섰다. 류 부장은 도착 당일 베트남 공산당의 응웬 푸 쯙 서기를 만나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류 부장은 쯙 서기에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류 부장은 쯙 서기와의 면담에서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최근 몇 년 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고위층 교류와 무역,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가자고 강조했다.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리 부총리의 인도 외무장관 접견과 류 부장의 베트남 방문이 미국의 패네타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 참석에 이어 베트남, 인도 방문 시기와 겹친 데 주목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패네타 국방장관이 상그릴라 대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 증강 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중국과 잦은 다툼을 벌여온 베트남, 인도 방문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중국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대응외교를 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패네타 장관은 베트남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했고, 인도에서는 만모한 싱 총리와 시브산카르 메논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음.

● 日, 주중 대사 '센카쿠 발언'에 발끈(6/8)

- 일본 정부가 도쿄도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매입운동을 비판한 주중 대사의 발언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며 주의를 줬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음. 스키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7일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사의) 발언은 정부 입장과 다름. 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음. 니와 대사는 외무성에 자신의 발언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정권 핵심 관계자들도 주중 대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음.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7일 회견에서 "대사의 발언을 (일본) 정부의 견해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고,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책조사회장은 "나는 도쿄도가 아니라 정부가 (센카쿠를) 사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산케이신문은 니와 대사가 대중(對中) 비즈니스를 중시하는 이토추 상사의 사장을 역임했다고 거론하며 "대사가 중시하는 게 국익인지, 회사의 이익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고, 그를 대사에 임명한 민주당 정권도 비판했음.
- 니와 대사는 7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도쿄도가 센카쿠 열도를 사들이려는 데 대해 "매입이 실행되면 일본과 중국 관계에 엄청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발언했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과 일본 간에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도쿄도 대신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음.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사이타마현에 사는 한 민간인에게 있음.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는 "민간인 소유여서는 (영유권 강화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5일까지 10억5천만 엔(155억원)의 매입 성금을 모았음.

● <中·日 조어도 '분쟁' 재가열 조짐>(6/10)

- 일본의 우익 세력이 10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



도) 부근에서 대규모 낚시 행사를 연 데 대해 중국 언론매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행사는 다오위다오 '시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낚시 대회가 열렸고 이를 일본 정부가 비호했다면서 반감을 드러냈다. 중국 중앙(CC) TV는 일본의 보수성향 의원 6명이 오전 일찍 민간선박 편으로 다오위다오에 도착해 주변 해역을 돌면서 사실상 시찰활동을 했고 사진 촬영과 더불어 자원조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CCTV는 이런 제스처가 사실상 주권 시위로 비쳤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외에도 정치단체에 소속된 우익 인사를 비롯해 오키나와현 활동가 등 120명이 14척의 배에 나눠타고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들이 행사 참석 선박들을 보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신문사는 이번 낚시 대회는 '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라는 단체가 주관한 것이라면서 과거 일본 항공자위대 사령관을 지낸 인물이 현재 해당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 매체들은 최근 몇 개월 새 우익세력 주도로 일본에서 다오위다오 매입 운동이 벌어진 데 이어 낚시 행사를 가장한 다오위다오 '주권 시위'가 발생한 데 주목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쟁론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권 침략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일각에서는 다오위다오에서 일본이 먼저 낚시행사를 가장한 주권 시위를 한 만큼 중국 역시 민간인 단체를 중심으로 다오위다오 접근 또는 상륙 시도를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다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액션'이 현실화하면 외교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일본 내에서는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 주도로 다오위다오 매입 모금 운동 열풍이 불고 있음. 모금 활동에 우익 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금까지 수백억 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음. 중국의 기류 역시 심상치 않음. 끊이지 않는 일본의 다오위다오 강탈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 민간 연구단체인 중국전략문화촉진회는 지난 5일 '2011년 일본 군사력 평가보고(민간판)'를 내고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통해 조만간 다오위다오를 무력으로 쟁탈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 관심을 끌었음.
- 특히 중국과 일본은 올해로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을 맞지만, 그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싸늘함. 다오위다오 갈등 외에도 지난 2월 가와무라 다카시(河村隆之) 일본 나고야 시장의 난징(南京) 대학살 부정 발언, 중국이 테러세력이라고 비난하는 '세계위구르회의(WUC)'의 지난 5월 도쿄 대회 개최 등이 분쟁의 소재로 작용해 양국 간 고위층 교류가 사실상 끊긴 상태임. 그런 상황에서 일본 측에서 중국의 외교관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문제 삼고 나서자 중국이 발끈하고 있으며 일본 공격용 빌



미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는 분석도 나옴.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 2010년 다오위다오 부근에서 일본 경비선과 중국 어선 간 충돌사건을 계기로 1년 넘게 '대립'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작년 말 고위급 회담으로 수습되는 듯했던 중일 양국 관계가 다시 크게 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마. 미·러 관계

● 클린턴 美 국무 "러, 조지아 점령지서 철군해야"(6/5)

-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와의 전면전 이후 점령한 남(南)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음.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이날 흑해연안의 조지아 도시 바투미에서 열린 미-조지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이같이 요구했음. 클린턴은 "우리는 2008년 8월 12일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체결된 종전 협정을 러시아가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문서에는 압하지야와 츠헨발리 지역(남오세티야)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해 2008년 8월 이전의 주둔 위치로 물러나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는 2008년 8월 조지아내 자치공화국이었던 남오세티야 공화국 분리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조지아와 5일간에 걸친 전면전을 치른 바 있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러시아는 유럽의 중재로 조지아와 종전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공화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음. 조지아는 러시아가 불법으로 두 공화국을 점령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조지아에서 독립을 선포한 두 공화국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2004년 1월 미하일 사카슈빌리 대통령 집권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등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는 옛 소련 국가 조지아는 이에 반발하는 러시아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

● "러, 美와 아사드 퇴진 협상 안해" <외무차관>(6/6)

- 러시아는 미국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어떤 협상도 벌이고 있지 않다고 러시아 외무부 미하일 보그다노프 차관이 5일(현지시간) 밝혔음. 보그다노프 차관은 이날 미국이 러시아와 아사드 대통령 사퇴와 관련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측 발표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요청을 받고 "그러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다"며 "이 문제는 제3자가 아닌 시리아인들 스스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그다노프 차관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코피 아난 시리아 특사의 평화 중재안과 시리아 내 유엔 휴전감시단의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시리아 내 폭력의



약순환을 끊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려고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 외무부, 클린턴 반러 발언에 발끈(6/7)

- 러시아 외무부가 6일(현지시간)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캅카스 지역의 옛 소련 국가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를 방문해 행한 도발적 발언에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며 미국과 각별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지아를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현지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2008년에 이어 다시 조지아를 침공할 수 있다며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클린턴은 흑해연안의 조지아 도시 바투미에서 열린 미-조지아 전략파트너십 회의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선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와의 전면전 이후 점령한 남(南)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러시아 외무부는 이와 관련 이날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클린턴 여사의 조지아 관련 발언은 미국이 2008년 캅카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러-조지아 전쟁)에서 필요한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당시 바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루지야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받아들이겠다는 앞선 약속, (그루지야에 대한) 외국의 대규모 무기 공급 등이 미하일 사카슈빌리(조지아 대통령)로 하여금 남오세티야에서 모험적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루카세비치는 "그 결과 수백 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되고 (이 지역에 주둔 중이던)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숨졌다"며 "러시아는 어쩔수 없이 침략자의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루카세비치는 현재 당사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미국 고위 관료들이 다시 사카슈빌리를 지지하는 요란한 발언을 하고 '러시아가 그루지야 영토를 불법 점령했다는 그의 거짓 선전 주장을 글자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루지야의 복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카세비치는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러시아는 2008년 8월 조지아내 자치공화국이었던 남오세티야 공화국 분리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조지아와 5일간에 걸친 전면전을 치른 바 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러시아는 유럽의 중재로 조지아와 종전 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공화국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조지아는 러시아가 불법으로 두 공화국을 점령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조지아에서 독립을 선포한 두 공화국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04년 1월 사카슈빌리 대통령 집권 이후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등 친서방 노선을 걷고 있는 조지아는 옛 소련 종주국 러시아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조지아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옛 소련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미국은 이런 조지를 적극 지원하며 역시 러시아의 원성을 사고 있음.

바. 중·일 관계

● "日, 다오위다오 무력 쟁탈할 것"〈中민간妍〉(6/6)

- 일본이 장차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를 무력으로 쟁탈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에서 나왔음. 중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중국 전략문화촉진회는 5일 베이징(北京)에서 처음으로 '2011년 일본 군사력 평가보고(민간판)'를 갖고 이같이 전망했다고 중국 인민망(人民網)이 6일 전했다. 군사·대만·문화문제 전문가와 사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비영리 민간조직인 이 단체는 일본이 서남부 도서 방위를 강화하고 대만해협 문제에도 참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적·지역적 안보 상황과 미국의 전략 조정에 따라 일본은 새롭게 군사부문을 재편성할 것으로 예상했음.
- 이 단체는 일본의 '2011년 이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서도 일본이 군부대를 균형있게 배치하던 방식을 바꿔 군사 중심을 서남부로 이동시켜 서남부 지역의 경계, 방공(防空), 지휘통신 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은 차기 총의원(하원) 총선거 공약에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 공약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하기도 했음.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여전히 포함됐음.

● 日 외무성, 中 파견 직원 1명에 귀국령(6/6)

- 일본이 중국 외교관의 스파이 의혹 사건과 관련한 보복을 우려해 상하이에 파견한 직원을 갑자기 귀국시켰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음. 일본 외무성은 중국 상하이에 파견한 전문직 연수생 남성 직원 1명에게 5일자로 귀국을 지시했음. 이 직원은 작년부터 2년 예정으로 상하이에서 어학연수 중이었음. 지방 도시의 시설을 둘러본 뒤 중국 정부의公安 부문으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은 상태였음. 외무성은 중국 당국이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중국 외교관의 스파이 의혹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 남성 직원을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귀국을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앞서 일본 경시청公安부는 허위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뒤 일본 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외국인등록법상 허위신고)로 전주일 중국대사관 1등 서기관(45)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음. 일본 경찰은 이 중국 외교관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보기관 출신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보) 기관원으로서 조직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음.

● **中 법원, 日 웹사이트 공격 中 해커에 중형(6/6)**

- 중국 법원이 난징(南京) 대학살을 부정하는 일본 내 웹사이트를 공격한 유명 해커에게 중형을 선고했음. 6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제1중급법원은 최근 타인에게 컴퓨터 불법침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일본 사이트를 해킹한 왕셴빙(王獻冰·37)에게 징역 5년과 더불어 벌금 60만 위안(1억 1천127만 원 상당)을 내라고 판결했음. 왕셴빙은 중국에서 잘 알려진 해커로 "난징대학살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격분해 지난 2000년 '고독한 검객'이라는 이름의 대(對) 일본 정부기관 공격용 사이트를 만들어 유명해졌음. 그는 최근에도 일본 나고야 시장의 난징학살 부정 발언 등을 빌미로 중국 내 해커들을 이끌고 직접 일본의 관련 사이트들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음.
- 일본 내의 난징 대학살 부정 발언은 중국에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도발로 지금까지 그와 관련한 해커 범죄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이 엄벌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관심이 쏠림.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이 해커의 천국이라는 비난을 받는 점을 의식해 중국 법원이 해킹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日, 주중 대사 '센카쿠 발언'에 발끈(6/7)**

-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가 일각의 센카쿠(尖閣·중국명 дя오위다오<釣魚島>) 매입 방안에 반대를 표시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7일 보도했음. 중국신문사는 니와 대사가 한 서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으며 이는 일본 고위 공무원으로서 처음이라고 소개했음. 니와 대사는 "만약에 센카쿠 매입이 실행된다면 일본과 중국 관계에 엄청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와 대사의 이런 언급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일본 도쿄도 지사가 주도하는 센카쿠 매입 시도에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중국신문사는 전했다.
- 일본 내에서는 우익세력이 센카쿠 매입 '열풍'을 주도하고 있음. 대표적인 극우파인 이시하라 지사는 "(일본이) 센카쿠 문제로 중국을 무서워하면 히노미루(일장기 가운데의 붉은색 원)는 오성홍기(중국 국기)의 여섯 번째 별이 될지도 모른다"고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음. 이에 중국에서는 센카쿠 열도의 다른 이름인 дя오위다오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따져볼 때 중국의 고유 영토로 쟁론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맞서고 있음. 현재 дя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임.



사. 중·러 관계

● 〈中·러시아 '유착'..외교·안보 변수로 급부상〉(6/5)

- 중국과 러시아의 '유착'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음.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요청을 뿌리치고 중국을 먼저 찾는 파격을 시도하고 양국 간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임. 옛 소련 붕괴 직전에는 세계 사회주의권의 주도권 쟁탈로 대립하고, 그 이후에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탓에 상대적 열세였던 러시아의 대중 견제로 끌려왔던 양국이 이제는 미래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임.
- 먼저 푸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과 서방의 초청에 '노(No)'라고 말하고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北京)을 첫 외국순방지로 정했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유착이 예고됐음.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에서의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불참한 것은 서방 엘리트 국가들의 모임을 거부한 것이자 방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기회를 건어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음.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정치·외교·안보·경제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임. 푸틴 대통령이 방중 직전에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낸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가 없고, 두 나라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국제 문제도 의논되고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임. 러시아의 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변화를 점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는 물론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거리를 두면서 대립각을 유지해왔음. 특히 홀라 학살 사건을 비롯해 1년 가까이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르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관용'을 유지하는데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 역시 여타 이권을 챙기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찰떡 공조 태세임.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서방의 만류에도 사실상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이란을 두둔 중임. 푸틴 대통령은 물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6~7일 SCO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로 아바디네자드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서방의 이란 제재로 생긴 공백 속에서 이란의 석유 이권을 챙기려는 속셈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둘 다 북한 편들기에 주력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개최 취지에도 북한이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이제는 아예 헌법을 개정해 핵무기 보유국을 명시해도 묵묵부답임.
-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협력을 통해 '윈-윈(Win-win)'을 추구하고 있



음. 세계 경제가 수년째 위기를 겪는 가운데 가스 대국인 러시아는 여전히 호황인 중국을 상대로 가스 판매를 성사시켜 서로 '부흥'하자는 쪽으로 의기투합하는 모습임.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에 에너지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인 것도 이 때문임.

-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유착'은 세계 경제와 정치·외교·안보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임.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미국이 세계경제 주도권을 급속하게 상실하고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로 휘청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뜨거워지고 있음. 유일한 성장 엔진으로 부상한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에너지 확보에, 러시아는 가스 공급으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필요로 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간의 유착은 그 겨냥 점이 미국이라는 걸 쉽게 눈치 챌 수 있음.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대거리'는 부담스런 탓에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한다는 이미지 대신에 다극화 논리를 펴고 있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가 아닌 다극적 국제질서를 지지한다고 했음.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들어 서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해 군사분야의 협력을 시작했음. 러시아는 자국을 겨냥 미국 등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맞서기 위한 '우군' 확보 차원에서, 중국은 갑작스럽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천명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력 확장에 나선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SCO는 중국과 러시아 간 유착의 기본 축이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의 외교·안보 이론가인 류구창(劉古昌) 전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순조로운 협력을 전망했음.

● 푸틴 "러·중이의 고려 없이 국제문제 해결 불가"(6/5)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과의 공조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혀 주목됨. 푸틴 대통령은 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가 없고, 두 나라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국제 문제도 의논되고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방문에 맞춰 인민일보에 낸 '러시아와 중국, 협력 신천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음. 그는 이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거의 일치한다"며 "그것은 바로 국제법을 따르고 상대방 국가 이익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중동, 북아프리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한반도와 이란의 핵 문제 등에 대해 중국과 공통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음. 국제 이슈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임. 그는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중시한다"며 "베이징(北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발전, 협력 방



안에 대해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경제와 기업협력, 무역, 금융투자, 에너지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 많은 양의 러시아 가스를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와 중국은 서(西) 시베리아 지역인 알타이에서 중국 북서부로 잇는 서부노선, 알타이에서 중국 북동부와 남북한으로 잇는 동부노선을 통한 대(對) 가스 공급 및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그동안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음. 푸틴 대통령은 또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원자력발전소 기술의 중국 수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中 "푸틴 방중 정상회담, 매우 중요한 의의"(6/5)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5일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만남은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양호하게 발전해오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정상이 경제무역, 에너지, 사회기반시설건설 방안은 물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를 주요 의제로 올려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확대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러 분야에서 세부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 류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홀라 학살' 등으로 국제적인 공분을 사는 시리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양국이 그와 관련해 밀접한 소통을 해왔다"고 대답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은 시리아에서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하루빨리 정세가 완화되는 속에서 정치적인 대화가 진전돼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코피 아난 전(前)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을 지지하고 중립 양국은 이와 관련해 입장이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외부세력이 시리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양국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시리아 문제의 정세완화와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또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외에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는 각료 6명과 더불어 국영 가스프롬 사장 등이 수행 중임.

● <러-中, 전면적·전략적 협력 공동성명 채택>(6/5)

- 중국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두 나라 정상은 이날 회담 뒤 러-중 양국간 '전면적이고 대등한 신뢰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음. 양국은 또 중국 텐완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원자로 건설 협력과 이를 위한 러시아의 대(對) 중국 차관 제공에 관한 정부간 협정서도 가조인했음.

- 중국은 지난해 9월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텐완 원전 1, 2호기를 완공해 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추가로 3, 4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원자력공사 '로스아톰'과 중국 원자력에너지청은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로드맵에 서명했음.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중국 산업정보화부는 산업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양국 관광 당국은 관광 분야 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음. 양국의 대표 언론사인 이타르타스 통신과 신화통신은 언론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었음. 이밖에 투자, 금융 분야 관계 기관들 사이에도 일련의 협력 의정서들이 체결됐음.
-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회담에서 "공동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유례없는 수준과 질적 단계에 도달했다"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음. 푸틴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기본적 이해가 폭넓게 일치한다"고 평가했음. 이에 후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음.

● <中·러, 국제이슈 '찰떡 공조' 확대 주목>(6/6)

- 중국과 러시아가 부적 우애를 과시하면서 주요 국제 이슈와 관련해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을 상대로 '어깃장' 공조를 해가고 있어 주목됨.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에 이어 이란, 아프가니스탄 해법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 내기를 할 것으로 보여 서방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임.
- 우선 첫 외국순방국으로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 베이징(北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서방과는 다른 기준의 국제질서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음.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 주석이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협력해 더 공정하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에 공감하면서 "유엔, G20(주요 20개국), 브릭스 등의 국제조직의 틀 내에서 양국이 협력을 증진해갈 것"이라고 맞장구쳤음.
- 두 정상의 이런 언급은 회담에서 시리아·이란·북한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고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들과 관련해 서방의 기존 해법과는 분명한 선긋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후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사태 해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러 채널을 통해 서방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시간에 이뤄진 중국 외교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이 시리아에 무력으로 개입하는 데



- 반대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확인하기도 했음.
- 이런 가운데 그루지야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중국·러시아 정상회담 종료 직후 서방의 시리아 해법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그간 상황을 종합해보면 서방은 민간인 100여 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홀라 학살' 사건을 비롯해 1년 가까이 악행을 저지르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무력을 써서라도 끌어내려야 하며 그런 작업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외면'하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는 자체적인 정치적 해결 과정을 거쳐 풀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외부 개입은 사태를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시리아 정부군을 상대로 무기 판매 등의 짝퉁한 이익을 챙겨온 두 국가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제사회는 잘 알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의 '찰떡 공조'는 이란 핵 문제에도 적용될 것으로 관측됨.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란의 핵개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핵무기 개발로 치닫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만을 주장하면서 서방의 이란 제재를 가로막고 있음. 사실 이란 처지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구세주'인 셈임. 아바디네자드 이란대통령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핑계 삼아 베이징에서 중국, 러시아와 별도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아바디네자드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행보는 이란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 중재그룹인 '6자(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와 이란 간의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확실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목소리로 서방에 반기를 들게 되면 이란 핵 문제는 이른 시일 내에 풀릴 수 없다는 지적임.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함.
 -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기간에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고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도 카르자이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의 공백을 틈타 아프가니스탄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정치·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할 태세임. 후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된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임.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북한 편들기 공조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임.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와는 다른 '유착'에 가까운 공조에 나서면서 세계 정치·외교·안보 지형에 새 판짜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경제위기로 여러 방면에서 입지가 좁아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화약고인 중동, 남중국해 등에서 분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서 해당 지역에 군사력 확장을 천명하면서 그 중심점인 남중국해는 일촉즉발의 분쟁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 집권 이후 미국 등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강행 의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그와 관련한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中·러, 국경경비 군사력 감축 합의(6/7)

-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국경경비 군사력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음. 통신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일 확대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전문을 공개하고 이런 군사분야의 합의 내용을 부각해 썼음. 공동 성명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호, 이해, 상호 신뢰, 평등 호혜의 정신에 따라 양국 국경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음. 여기에는 우선 접경에서 양국 군의 합동 검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군사력 감축조치, 경계하천 항해, 접경 환경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군 간의 전통적인 우호를 증진하고 각 층간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지역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한 합동 군사훈련을 촉진해가자고 약속했음.
- 한편 중국 차기권력의 두 축인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가 6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 증진을 재차 약속했음. 시 부주석과 리 상무부총리는 전날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리는 와중에 푸틴 대통령과 별도로 회동했음. 회동에서 시 부주석은 세계가 유례없이 엄청난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이익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런 시각에 공감한다면서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더 강화해가야 한다고 화답했음.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관계가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음. 리커창 상무부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천연자원, 핵에너지, 항공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전략적인 프로젝트 협력을 촉진해가자고 제안했음. 푸틴 대통령은 방중 첫 날인 5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확대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이고 대등한 신뢰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음. 신화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도 면담했다고 확인했음.

● <中·러, 서방의 시리아·이란 해법에 '대립각'>(6/7)

-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적인 쟁점인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서방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 주목됨. 두 사안에 대해 서방과 대립각을 세웠던 러시아와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흘간 방중을 계기로 서로 의기투합해 서방 해법에 '노(No)'라고 날을 세웠음. 푸틴 대통령이 5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6일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를 잇달아 만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성명을 내고 강제적인 시리아 정권 교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공정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작금의 시리아 위기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공동성명의 요지임. 시리아의 주권, 독립, 영토보존이 존중돼야 하고 그것이 바로 유엔현장의 정신에 들어맞는다는 논리가 담겼음. 다시 말해 15개월간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외부 세력이 개입해선 안 되며 한 발짝 나아가 외부의 무력 개입에 절대 반대한다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임.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공조해 서방의 시리아 해법에 맞설 것'이라는 의지도 다지고 있음.
- 이런 가운데 터키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6일 여타 서방 국가들과 회담을 하고서 학살자인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축출을 위해 국제사회가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음. 이미 정치적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아사드 정권을 무력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역설했음. 어린이를 포함해 108명의 희생자를 낸 '홀라 학살'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정권 비난 성명을 낸 데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이 자국 주재 시리아 대사를 추방하는 등 서방을 중심으로 시리아 정권 축출 요구가 들끓고 있음.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시리아를 직접 방문해 유혈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
- 그러나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강고하게 버티는 형국임. 국제사회의 이런 강한 압박에도 아사드 대통령이 뻔뻔하게 버티는 데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체적인 분석임.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에 거액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중국은 서방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석유를 포함해 적지 않은 이득을 챙기면서 보호막을 제공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실제 미국을 필두로 서방이 아사드 대통령 교체 의지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에 분명한 반대 견해를 표시하면서 1년 3개월간 지속해온 지옥 같은 시리아의 유혈사태는 여전히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전문가들은 시리아 사태가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음.
- 관영 신화통신은 7일 시리아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가 양분됐다고 썼음.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짐을 보임. 사실 이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핵무기 개발 행보를 보여왔다는 게 정설임. 조만간 이란과 국제중재그룹인 '6자(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그런 가운데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5일부터 사흘째 베이징에 머물고 있음.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의 참관을 명목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임.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6일 원자바오 총리와는 만났음. 회담 후 원 총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 총리는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중동 국가들의 핵무기 취득과 개발을 반대한다고 했으나 이란 핵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견상 양비론의 형태를 띠었지만 사실상 이란 입장을 거든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있음.

-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날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또는 어떤 형태의 무력 사용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내 실제 '속내'를 드러냈음. '6자'와 이란 간 회담을 앞두고 6자 내의 분열은 불가피해 보여 이란에 대한 일 치된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임. '우군'의 지원에 우쭐해진 탓인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6일 강대국들이 회담 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서방을 비난하고 나섰음. 서방이 어떻게든 회담 개최를 늦출 핑곗거리를 찾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임. 아마디 네자드 대통령은 7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임.

아. 기 타

● 美 킹특사, 한·일 순방..데이비스 유럽행(6/5)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7~15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5~9일 러시아와 브뤼셀, 프랑스를 각각 순방한다고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밝혔음. 킹 특사는 7~9일 일본에 체류하면서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장, 스키 야마 신스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과 만나 북한에 의한 일본 인 납치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 이어 9~15일에는 서울로 이동,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 전략기획관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자 복송 문제 등을 놓고 협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킹 특사는 한국 체류중 통일연구원이 개최하는 콘 퍼런스에 참석,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기조연설을 함.
- 현지 외교소식통은 킹 특사의 행보에 대해 "최근 북한의 민생·인권 문 제를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외교일정으로 파악된다" 고 말했다. 데이비스 특사의 경우 5~6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교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 들과 회동,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점검함. 이어 7일에는 유 럽연합(EU)의 비확산문제 및 아시아 문제 담당 고위관리들과 회담을 가짐. 또 8일에는 파리에서 프랑스 외교부 고위관리들과 국제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 외교소식통은 "최근 한중일 순방을 마친 데이비스 특 사가 6자회담 참가국 대표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하 지만 최근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북핵 국면의 조기 전환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 <강대국 '아시아 패권' 다툼..서해로 밀려오나>(6/6)

-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이른바 '아시아 패권'



을 놓고 경쟁하면서 서해가 뜨거운 각축장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신국방전략에 맞서 중국은 대양(大洋) 진출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G2(주요 2개국)'의 경쟁이 본격 전개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미중과 연합하는 구도를 연출하고 있음. 비야흐로 한반도 주변에 '신(新) 냉전구도'가 형성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강화되고, 미국의 아시아 복귀가 본격화 될 경우 동북아 정세의 급변은 물론 한반도가 어쩔 수 없이 대치전선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서해가 주목되고 있음. 중국에 서해는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곳임.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인데다 연안 대도시들이 대거 몰려있는 곳임. 이 때문에 중국은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정례적으로 펼치고 있음. 최근에는 지난 4월 중순 러시아 해군과 함께 칭다오(靑島) 부근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음. 이를 위해 중국은 구축함 5척을 포함한 18척의 함정을 투입했음. 청나라말 북양해군의 뼈아픈 패배를 기억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미국이 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대양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는 서해 방위를 위해 지난해 시험항해를 마친 항모 바랴크호에 이어 제2, 제3의 항모가 서해를 작전지역에 넣고 위용을 과시할 가능성이 큼.
-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음.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오는 2020년까지 미 해군 함정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음. 특히 전체 11척인 항공모함 가운데 6척을 아시아에 배치할 예정임.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 중국을 견제할 전략을 행동에 옮기고 있음. 한·미·일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그리고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 싱가포르 상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3국 국방장관은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동대처를 다짐했음.
- 일본은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 구도의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과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갈등으로 언제든 서해에서 충돌할 불씨를 안고 있음. 자칫 미·중간 해양패권 다툼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거론되는 이유임.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 해군의 군사력을 4강대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냉철한 분석과 현명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日,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자금 지원"(6/6)

- 일본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외



무성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35만 달러(약 4억1천만원)를 기부하기로 했음.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지난 4월 일본이 중국과 대륙붕 마찰을 빚고 있는 오키노토리시마(沖ノ島) 부근의 대륙붕 확장을 인정했음. 외무성은 향후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발언권 확보를 위해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음. 외무성은 이런 방침을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해양법조약 체결국 회의'에서 표명했음.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지난 4월 일본이 제출한 60여 건의 대륙붕 확대 신청 가운데 오키노토리시마 북쪽 등 4개 해역 31만km²의 대륙붕 확대를 인정했음.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沖ノ島)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인정했다고 발표해 중국의 반발을 샀음. 대륙붕으로 인정받은 해역에 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밖이라 해도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음. 하지만, 중국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암초로 대륙붕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 中 "상하이협력기구는 동맹 추구 안 해"(6/6)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6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성격에 대해 "(회원국 간에) 평등과 협력, 공동발전을 모색한다는 게 기본정신이며 동맹을 하지 않고 대립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CO가 동방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SCO는 대외개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군사, 정치적인 동맹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류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에 언급, "중국은 힘이 닿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에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면서 "지하자원 개발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하고 활발한 인적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이 독립과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하기를 바라며 그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中 "황옌다오 석호에서 철수"(6/6)

-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의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섬) 중심부에 있는 석호(瀝湖)에서 자국의 공무선(公務船)을 완전히 철수시켰다고 확인했음.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 공무선이 3일 황옌다오 석호에서 나감에 따라 정리 작업 후 우리 측 공무선 2척도 5일 석호를 빠져나갔다"며 "현재 석호 안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정상 조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류 대변인은 "황옌다오는 다툼 없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앞으로 필리핀의 도발 행위가 없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계속 황옌다오 사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과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라울 에르난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양국 간 협의 이후 중국이 스카보러섬



중심의 석호에 포진한 순시선을 철수시켰다면서 필리핀 어로국 선박도 대치 해역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 <러 푸틴 '美 G8 불참 中 SCO 참석' 中 시각>(6/6)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대신 중국을 먼저 방문한데 대해 중국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특히 중국 방문이 6~7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며 미국에서 열린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불참과 대조를 이룬 점이 더욱 관심을 끌었음. 푸틴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달 18~19일 미국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국제사회에서는 그가 러시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미국의 비판 등에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거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음. 러시아는 부인했지만 불화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한 결과'라며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중국 신화통신(新華通訊) 등이 전했다.
-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연구센터 쉰난첸(陸南泉) 부주임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데는 대선 중 미국이 푸틴 반대파를 지지했고 시리아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러시아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는가하면 미국이 당선 축하도 한참 뒤에야 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그는 이어 "푸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독립국가연합(CIS)을 방문하기는 했으나 대국(大國)을 방문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라며 "이는 그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중러관계와 대외전략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상하이사회과학원 상하이협력기구연구센터 판광(潘光) 주임도 "중러 양국이 그동안 '정치는 뜨거워도 경제는 냉정하게(政熱經冷)'라는 명확한 경제협력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취약한 경제 협력부문을 강화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상하이협력기구가 '동방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서방의 지적에 대해서도 중국은 '냉전적 사고'라고 적극 대응했음. 중국국제문제연구소 SCO연구부 천위룽(陳玉榮) 주임은 중국인터넷TV에서 "NATO는 냉전시대의 산물이자 군사동맹으로서 SCO와는 존재의 본질부터 다르다"고 블록화 우려를 일축했음. 그는 "SCO는 같은 지역 동반자이자 비동맹 국가들의 조직으로 11년간 발전해 왔다"면서 "중아시아지역 안정에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SCO 내 군사적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도 SCO 성격에 대해 "(회원국 간에) 평등과 협력, 공동발전을 모색한다는 게 기본정신이며 동맹을 하지 않고 대립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CO는 2001년 창립 이후 경제협력은 물론 테러와 분리주의, 극단주의 척결 등을 주장하며 대테러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면



서 군사 블록화 가능성이 제기돼온 터라서 우려가 쉽사리 가리앉을지는 미지수임.

● 中, 상하이협력기구에 100억 달러 지원(6/7)

-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SCO)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7일 보도했음.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이날 제12차 베이징 SCO 정상회의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음. 후 주석은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에 철도, 도로, 항공, 통신, 에너지 분야 건설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이 이를 위해 100억달러를 대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음.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 주석은 역내 경제발전 도모 차원에서 회원국들로 구성된 특별회계 및 발전 은행 건립을 추진해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음. 후 주석은 아울러 회원국들이 SCO의 중기발전전략 계획에 동의하고 SCO를 조화로운 공동체로 가꿔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음. 후 주석은 또 아프가니스탄을 옵서버로, 터키를 대화파트너로 받아들여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음.
- 이로써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6개 정식 회원국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 아프가니스탄을 옵서버로, 그리고 스리랑카와 벨라루시, 터키를 대화파트너로 두게 됐음. 후 주석은 또 회원국들이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조기 경보와 긴급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SCO를 지역 안보의 믿을만한 보증 장치로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다고 전했음. 서로 문화와 교육 교류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인적교류 채널을 확대해가기로 약속했다고도 덧붙였다음. 후 주석은 6개 정식 회원국들이 5개국의 옵서버, 3개국의 대화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고 밝혔음. 로이터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시리아에 대한 무력 개입 또는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쪽으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력 사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도했음.
- 차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됨. SCO는 2001년 6월 15일 정식으로 창설됐음. 애초 지역 안보협력체로 출발했으나 경제협력으로 반경을 확대해가고 있음. 일각에서는 SCO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포괄적이고 지정학적인 동맹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상하이협력기구 베이징 정상회의 폐막>(6/7)

- 중국 베이징에서 6~7일 이틀 동안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시리아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정세 등에 대한 독자적 입장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폐막했음.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SCO 정상들은 7일 회의 뒤 채택한 폐막 선언문에서 국제 현안인 시리아 사태와 관련 "SCO 회원국들은 이 지역(시리아)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강제된 권력 이양,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유혈사태 종식을 위한 방안으로 서방이 거론하고 있는 무력 개입 방안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안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임.

- 선언문은 "시리아 영토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시리아의 자유와 영토적 통합성, 국가주권 등에 기초한 시리아 국민 전체의 폭넓은 대화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강조해온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원칙을 지지하는 주장임. 선언문은 이어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 "SCO 회원국들은 아프간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평화적이고 번영하는, 테러와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수립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아프간 내 국민화합은 아프간인들의 주도하에 아프간인들 스스로가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프간내 평화 정착 과정에서 유엔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선언문은 또 "특정 국가나 국가 그룹이 일방적이고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증강해 나가는 것은 국제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추진 중인 유럽 MD 시스템 구축 계획을 비판했음. 그러면서 "SCO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 스스로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문은 지적했음.
- 지난 2001년 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6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SCO는 이번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옵서버로, 터키를 대화 파트너로 받아들이며 몸집을 불렀음. 이에 따라 SCO는 6개 정식 회원국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 아프가니스탄을 옵서버로, 스리랑카와 벨라루시, 터키를 대화 파트너로 두게 됐음. 일부에선 옛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인접 국가들 간의 안보협의기구로 출범한 SCO가 테러와 분리주의, 극단주의 척결 등을 주장하며 대테러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군사블록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기구가 나토에 대응하는 동방의 군사동맹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상하이협력기구, 푸틴 측근 사무총장에 임명(6/7)

-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SCO의 사무총장으로 자신과 가까운 드미트리 메젠체프 전(前) 이르쿠츠크주(州) 주지사를 추천했음. SCO 회원국들은 푸틴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들여 메젠체프를 새 사무총장으로 승인했음.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SCO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지난 3월 대선 때 자신의 들러리를 섰던 메젠체프 전 주지사를 사무총장 후보로 내세우면서 "SCO의 경제협력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업위원회인데 지난 6년 동안 메젠체프가 이 위원회를 이끌었다"며 "그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한다"고 말했음. 푸틴은 "메젠체프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SCO의 경제 제도 개혁에 지속적 주의를 기



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SCO 사무총장은 키르기스스탄 정치인 무라트벡 이마날리예프가 맡아왔음.

- 메젠체프는 지난해 12월 대선 운동 기간에 갑작스레 대선 출마를 선언해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 상황에 몰렸던 여당 후보 푸틴의 '들러리'라는 평가를 받았음. 하지만 그는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한 지지자 서명 명단에서 규정을 넘는 많은 수의 결함이 발견돼 결국 대선 후보로 나서지 못했음.

● <페루 한국인 실종 헬기 수색작업 '난항'>(6/8)

- 페루 당국이 한국인 8명 등 승객 14명을 태우고 남부 쿠스코로 이동하다 실종된 헬리콥터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수색작업에 나섰다. 현지 기상악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8일 외교통상부와 주 페루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현지 군경 당국은 7일 오전 6시 7분께(현지시간) 헬기가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와아와야' 지역으로 수색 경찰관들을 보낸 데 이어 오후 2시 50분께에는 헬기를 띄워 이 일대를 수색했음. 하지만 실종 추정지역에 구름이 잔뜩 낀데다 진눈깨비마저 내리고 있어 수색 헬기는 실종 헬기를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한 채 몇 시간만에 수색을 종료했음.
- 와아와야 지역은 남부 잉카유적지인 쿠스코에서 60여k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고도가 4천725m에 달하는 고산 밀림지대임. 실종 헬기에 탑승한 한국인 8명은 6일 오전 쿠스코를 떠나 마수코에 도착한 뒤 이남바리 강으로 이동해 수력발전소 건설 후보지 3곳을 공중 시찰했음. 이어 같은날 오후 4시 30분께 마수코에서 헬기를 타고 쿠스코로 복귀하려 했지만 헬기는 이륙 한 시간 뒤 교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음. 그나마 수색작업에 희망을 주는 것은 실종 하루 가량이 지난 뒤 페루 공군이 실종된 헬기의 GPS 신호를 감지한 것임. 쿠스코 공항안전청에 따르면 발신위치는 마르카 파타 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하지만 이 지역 역시 4천600m 고지인데다 결빙과 눈 등 기상상황이 안좋아 당장 구조 헬기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페루 군경은 인근 산악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육상접근로를 통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일몰시간인 오후 5시 30분이 지난 시점이어서 이날중 육로 수색은 더 이상 어려울 전망이다. 현지시간으로 8일 이른 아침부터 본격적인 수색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주 페루 대사관은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 페루 당국의 수색작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직원 2명을 현장에 급파했음. 우말라 페루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 헬기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군경에 지시했으며 수색작업의 총 책임도 공군 장성급에게 맡겼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